

## 한국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Research about Recognition of Government Officials Regarding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Charge

이정일

Jung-II Lee

서울중부소방서

(2009. 9. 14. 접수/2010. 10. 8. 채택)

### 요 약

현대사회에서 재난의 잠재력이 커질수록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 기관 간 협력관계, 둘째, 재난관련법 제정 및 재난전담부서의 필요성 셋째, 재난관리 상황적 변수에 대한 인식으로 재난관리 상황요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재난유형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재난규모에 따른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넷째, 재난관리의 구조적 변수에 대한 인식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소방방재청,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차이,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의 혼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이다.

### ABSTRACT

As disaster potential power of modern society grows larger, to improve and reinforce efficiently a national system which prepares and responds disasters, analyzed the survey for government officials of the department disaster management. Following is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First, cooperative relationship to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Second, necessity of law establishment related crisis and disaster department. Third, by recognition regarding disaster management situational variable, overall recognition regarding disaster management situation, overall recognition regarding crisis type, recognition regarding occurrence possibility along disaster scale. Fourth, by recognition regarding structural variable of disaster management,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regarding disaster management, related organization, recognition difference of local government. It is a research about confusion regarding step of prevention - preparation - correspondence - restoration.

**Key words** :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Integrated disaster organiz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Reorganize

### 1. 서 론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사회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축적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재난의 잠재력(Potentiality)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재난의 잠재력이 커질수록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여 다가올 위험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최근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적 방침에 의해 공무원 정원과 조직이 축소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며 성과는 반드시 검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행정은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 재난관리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재난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 고유의 재난관련 인력 및 조직의 획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6월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영역통합형의 재난관리 중추기관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다.

재난관리체계의 개편에서 기구 통합이나 신설과

같은 대안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난관리체계가 단순한 기구의 통폐합이나 신설로 효과성 제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난 발생에 대한 예방 및 피해감소, 처리를 위한 통합적 재난관리조직을 구축 운영하여 왔으나, 새로운 정부조직 체계의 출범으로 인하여 과거의 재난관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국가재난상황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적 시각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본 논문에서 재난관리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 분석하였다.

## 2. 이론적 배경과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이해

### 2.1 재난의 개념

오늘날 재난은 자연재난, 인위재난, 사회적 재난을 망라하는 확대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홍수, 지진, 태풍, 가뭄 등이며 인위재난은 인간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것으로 화재, 폭발, 유출, 오염, 붕괴, 교통사고, 추락, 익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재난의 개념에 대하여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은 ‘통상 사망과 상해,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또한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의 차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은 보통 돌발적으로 일어나므로 정부와 민간 부문 조직이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구를 신속하게 하고자 할 때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재난관리법에서 재난을 자연재해와 구분하였으나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자연재난, 인위재난, 사회재난을 총망라하고 있다.

### 2.2 재난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

이제 재난은 다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없게 하거나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적 과제는 재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재난관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재난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는 불필요한 조직·인력·예산의 중복 또는 분산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인위재난과 자연재해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 바, 재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과감히 개선(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체계의 개선(일원화)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재난관리분야에서 사실상 중추적 역할을 담당(특히 각종 재난현장 대응의 주체역)하고 있는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2.3 재난관리 과정

재난관리 단계에 관한 연구는 총체적 재난관리 모형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방(완화), 준비, 대응, 복구의 4단계 국면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페탁(Petak, W. J)은 재난관리과정을 재난의 완화와 예방, 재난의 대비와 계획,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페탁에 의해 정의된 재난관리단계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각 단계를 구분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제도과 제도운영의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단계를 상이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단계를 용어의 정의에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정의해두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재난의 예방, 응급대책, 긴급구조, 복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Petak의 재난관리모형에 입각한 것으로서 재난의 사전관리와 사후관리 개념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이 과정들이 상호작용하고 있어서 1개의 기관에 의해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재난복구시는 장애의 예방 및 완화를 고려해야 하며 장애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줄이는 개발 등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고 특히 현대의 복합적 재난을 염두에 두어 재난유형별 관리가 아닌 재난과정별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 2.4 현행 재난관리조직체계

범위를 넓게 하여 확장된 재난관리체계의 주관부서를 보면 Table 1과 같이 다양하다.

또한 재난유형별 관계 법률도 아래와 같이 실로 다



Figure 1. Disaster management 4 phased models.

양하게 분산 존재하고 있다. 우선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를 보면 Table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재난이라 부르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한 법률도 기본적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을 중심으로 각 해당 부처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재난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이외의 법률은 물론 재난관련 법률이라기보다는 각각 해당 부처의 업무관련 법률로서

**Table 1. Competent Department of Disaster Management**

구 분	주관부서	비 고
자문기관 자문기관	NSC	청와대 국가재난 상황센터 사전협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국가기반재난 비상대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민방위, 자연 및 인위재난	소방방재청	
테 러	국가정보원	대테러센터
통합방위사태	합동참모본부	민·관·군·경 합동
법 죄	경찰청	

출처: 윤병준, 재난과 재난관리해설, 한국학술정보, 2007: 87에서 수정

**Table 2. Civil Defense and Emergency Preparation Jurisdiction Law**

분 야	소관 법률
민방위	민방재단본법, 민방위경보전달 예규
비상대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계엄법, 통합방위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징발법

출처: 윤병준, 재난과 재난관리해설, 한국학술정보, 2007: 103

**Table 3. Disaster Relationship Jurisdiction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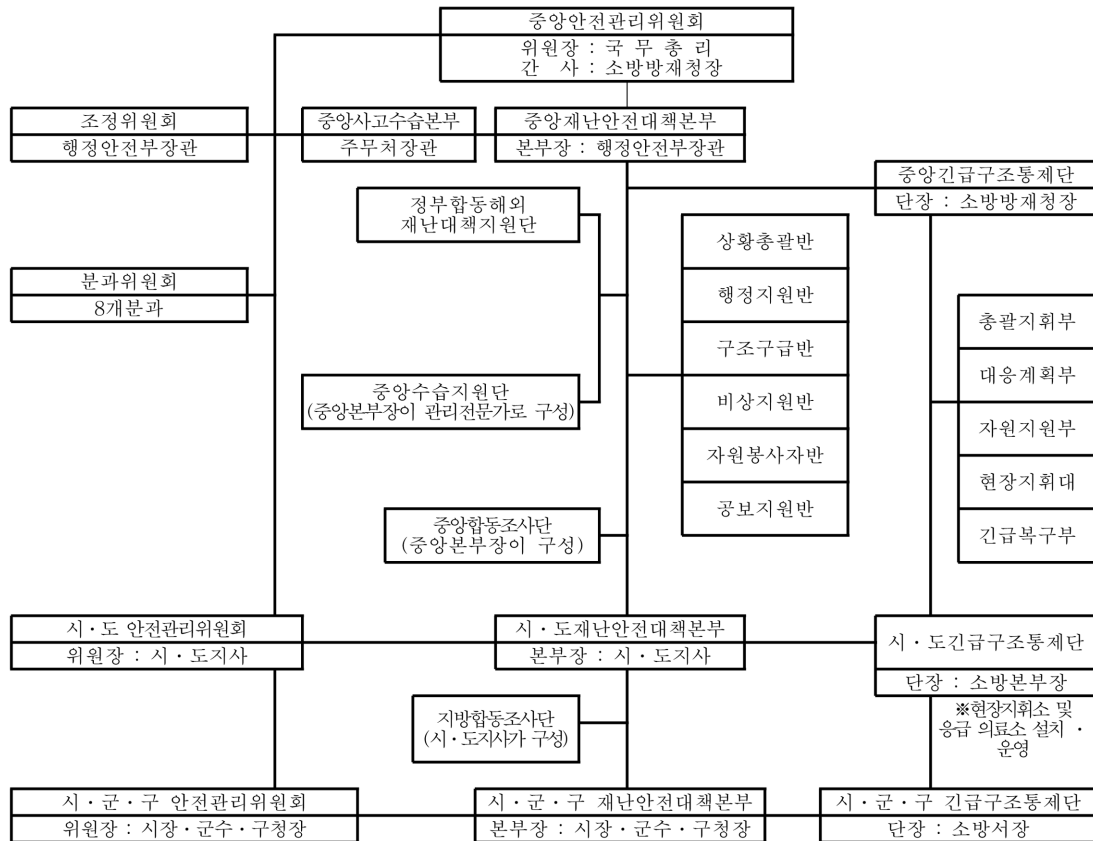
소관부처	법 령 명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재단본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화전정비법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석도·궤도법, 주택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항공법, 도로법, 도시철도법, 한국철도공사법, 하천법
지식경제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송유관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전기사업법, 석유사업법
지식경제부	전기통신기본법
국토해양부	항만법, 어항법, 개항질서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운법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법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	수도법,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보건복지가족부	전염병예방법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보건법

출처: 윤병준, 재난과 재난관리해설, 한국학술정보, 2007: 104

**Table 4.** Central Task of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구분	기구명	주요수행업무
심의기구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	국가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지방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총괄, 조정 국가안전관리 업무를 협의, 조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심의
	조정위원회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협의, 조정
수습기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인적 재난발생시 총괄·조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 발생시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수행
긴급구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간의 역할분담 긴급구조활동의 지휘, 통제
행정기구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정책수립 및 총괄조정 기능 재난관리 집행기능

출처: 재난의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위한 토론회(2009) “국가 재난관리정책에 있어 현장중심 소방의 역할증대” p59.



**Figure 2.** Disaster management system.

출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있는 가장 최근의 재난연감.

부분적으로 재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2.5 한국 재난관리체계**

재난의 수습체계는 중앙과 지방단위에 걸쳐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을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상기 설명대로 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중앙안전대책본부에는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을 두고 재난복구를 위한 중앙합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그리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를 두어 긴급대응하고 있다.

**3. 조사결과의 실증적 분석**

**3.1 연구의 가설**

이 연구는 재난관리에 관여하는 조직 및 부처들 간

의 얼마만큼 재난관리와 관련한 공조체계, 또는 협조체계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제기 되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요인으로 각 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인식이 다른가? 둘째, 재난관리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각 기관별로 이에 대한 인식은 다른가? 셋째, 각 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체계적인 협조 및 대응의 어려움,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고 있는가?

**3.2 자료수집방법 특성**

본 연구자는 국가통합재난관리행정체계에 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기획조정관실, 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재난상황실, 중앙119구조대, 중앙소방학교)과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9년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설문조사조사를 받았으며, 회수된

**Table 5.** Quality of Demographics

	소방방재청 (N = 167)			지방자치단체 (N = 136)		
	구분	N	%	구분	N	%
소속 부처	기획조정관실	19	11.4	서울특별시	35	25.7
	예방안전국	24	14.4	광역시	37	27.2
	소방정책국	33	19.8	도	31	22.8
	방재관리국	26	15.6	시 및 자치구	33	24.3
	재난상황실	13	7.8			
	중앙119구조대	32	19.2			
	중앙소방학교	20	12.0			
담당 기간	2년 이내	0	0	2년 이내	8	5.9
	2년~4년	0	0	2년~4년	79	58.1
	4년~6년	8	4.8	4년~6년	35	25.7
	6년 이상	159	95.2	6년 이상	14	10.3
직위	교	8	4.8	8~9급	26	19.1
	장	34	20.4	6~7급	54	39.7
	위	51	30.5	3~4급	16	11.8
	경	42	25.1	유관기관	40	29.4
	령	19	11.4			
	정	13	7.8			
담당 업무	재난관리업무	151	90.4	재난관리업무	79	58.1
	일반행정업무	14	8.4	일반행정업무	53	39.0
	기타	2	1.2	기타	4	2.9

303개 설문 중 소속기관별로 소방방재청 167개, 지방자치단체 136개의 설문을 회수하여 설문결과를 토대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사용된 표본의 특성은 Table 5와 같다. 설문지 응답자들의 근무처를 확인하면 소방방재청(기획조정관실, 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재난상황실, 중앙119구조대, 중앙소방학교)에 200부를 배포하여 167명 응답하여 83.5% 회수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및 자치구)에 200부를 배포하여 136명으로 68.0% 회수되었다.

**3.3 분석방법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분석은 사회과학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15.0)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카이제곱검정, 독립표본T검정을 실시하였다.

**3.4 현재 재난관리의 실태분석**

3.4.1 재난 발생가능성 및 재난관리정책 전반에 관한 분석

3년 간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 재난관리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적변수 그리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재난유형을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먼저 향후 3년 간 우리나라에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얼마정도로 보는지 재난규모별로 살펴보았는데, 관찰구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재난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중규모 재난 >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 재난 순으로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발생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난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생각이 일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재난관리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적요인을 다중응답 분석을 이용해서 살펴보면 소방방재청

**Table 7.** The External factors give influences to Disaster Management Activity

구분	소방방재청 (N = 167)		지방자치단체 (N = 136)	
	N	%	N	%
정치적요인	6	3.6	5	3.7
경제적요인	4	2.4	5	3.7
사회문화적요인	79	47.3	74	54.4
자연적요인	160	95.8	125	91.9
정부조직적요인	6	3.6	6	4.4
물리적요인	107	64.1	67	49.3
기술적요인	33	19.8	31	22.8
기술시스템적요인	39	23.4	25	18.4
인간의행위요인	63	37.7	66	48.5
작업시스템적요인	2	1.2	0	0.0
정보시스템적요인	1	0.6	4	2.9

은 자연적요인(95.8%) > 물리적 요인(64.1%) > 사회문화적 요인(47.3%) > 인간의 행위요인(37.7%) 순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적요인(91.9%) > 사회문화적 요인(54.4%) > 물리적요인(49.3%) > 인간의 행위요인(48.5%)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약간의 순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자연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인간의 행위 요인이 주로 재난관리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재난유형을 전통적 안보분야, 재난분야, 국가기반핵심분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주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재난 유형은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국가기반핵심기반분야 > 전통적 안보분야 > 재난분야 순 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재난 유형은 소방방재청의 경우 국가기반핵심기반분야 > 재난분야 > 전통적 안보분야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난분야 > 국가기반핵심기반분야 > 전통적 안보분야이다. 즉 중앙행정기관은 재난분야보다는

**Table 6.** Disaster Occurrence Possibility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alysis

구분	소방방재청 (N = 167)		지방자치단체 (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 재난	3.32	0.86	3.30	0.87	0.218	0.828
중규모 재난	2.91	1.12	3.96	0.414	0.407	0.684
대규모 재난	2.88	0.70	2.83	0.69	0.612	0.541

**Table 8.** Local Government Considers Traditional Security Field Importantly

구 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앙 행정 기관	전통적 안보분야	2.08	0.76	1.83	0.82	2.691	0.008
	재난분야	2.26	0.78	2.41	0.68	1.816	0.070
	국가기반핵심기반분야	1.94	0.80	1.76	0.78	1.009	0.314
지방 자치 단체	전통적 안보분야	2.24	0.84	2.05	0.74	2.060	0.040
	재난분야	1.91	0.63	1.94	0.93	0.359	0.720
	국가기반핵심기반분야	1.85	0.90	2.00	0.97	1.460	0.145

안보분야와 국가기반핵심기반분야에 관심을 두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분야들에 비해 재난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순서의 차이는 전통적 안보분야에서 존재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방재청 보다 전통적 안보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장활동공무원들과 비현장활동공무원들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4.2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국가 재난관리활동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해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 = 56.424, p < 0.001$ ). 현장활동을 중시하는 소방방재청은 통합무선망, 예방 대비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

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예방대비활동, 신속한 상황대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재난관리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제가 재난발생을 준비 대처하는 단계(예방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지원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지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발생 전 예방 및 대비단계에서 소방방재청에 비해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 = 3.325, p = 0.001$ ). 그에 반해 재해발생 후 대응활동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 = 1.984, p = 0.048$ ). 재난상황 종료 후 복구단계와 기타 지원단계에서는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생각의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대응단계, 복구단계, 지원단계, 대비단계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제가

**Table 9.** Analysis about Disaster Management Business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예방 대비 활동	45	26.9	66	48.5	56.424	0.001
신속한 상황대처	15	9.0	33	24.3		
피해복구 활동	15	9.0	18	13.2		
통합무선망	92	55.1	19	14.0		

**Table 10.** Necessity of Cooperation establishment with Local Government or Cent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비단계	2.69	0.97	3.02	0.72	3.325	0.001
대응단계	3.45	0.93	3.68	1.05	1.984	0.048
복구단계	3.31	0.99	3.29	1.02	0.160	0.873
지원단계	2.92	0.71	2.98	0.81	0.790	0.430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재난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지방, 중앙 행정기관가과의 체계적인협조 및 대응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단계(예방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지원단계)별로 비교하였다. 재난관리담당자의 업무 수행과는 달리 재난발생 전 예방 및 대비활동에서 소방방재청이 지방자치단체보다 재난관리에 대한 단체 간 체계적인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한다( $T=2.164, p=0.031$ ). 그 외의 단계에서는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재난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의 결과와 비슷하게 대응단계, 복구단계, 지원단계, 대비단계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재난관리의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 단계(예방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지원단계)별로 소방방

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였다. 위의 결과들과는 다르게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재난관리에 있어 소방방재청과 부처 간에 정보제공이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T=1.553, p=0.121$ ), 평균이 3보다 낮으므로 재난관리 공무원들간의 정보제공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 통합재난관리에 있어 소방방재청과 유관기관간의 무선통신망이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결과가 2에 가까우므로 대체로 잘 되고 있지 않으며 소방방재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무선통신망이 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t=4.371, p=0.001$ ).

정부가 재난에 대해 체계적으로 예방 및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생각

**Table 11.** Cooperative System to Each Station

구분	소방방재청 (N = 167)		지방자치단체 (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비단계	3.29	0.86	3.06	0.97	2.164	0.031
대응단계	3.89	1.08	3.90	1.07	0.099	0.922
복구단계	3.27	0.93	3.38	0.95	0.981	0.327
지원단계	3.14	1.08	3.32	1.07	1.443	0.150

**Table 12.** Commuication System to Each Station

구분	소방방재청 (N = 167)		지방자치단체 (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비단계	2.71	1.06	2.88	0.84	1.553	0.121
대응단계	2.56	0.84	2.57	1.03	0.141	0.888
복구단계	2.72	1.01	2.79	0.85	0.815	0.416
지원단계	2.71	0.83	2.74	0.82	0.239	0.812

**Table 13.** Information System to Each Station

구분	소방방재청 (N = 167)		지방자치단체 (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방방재청-부처 정보제공	2.71	1.06	2.88	0.84	1.553	0.121

**Table 14.** Radio Communication System to Each Station

구분	소방방재청 (N = 167)		지방자치단체 (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방방재청-유관기관 무선통신망	2.13	0.79	2.55	0.91	4.371	0.001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방재청에 비해 예방 및 대비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 $T=0.2555, p=0.011$ ). 체계적으로 예방 및 대비를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소방방재청은 통합무선망에 대한 관련기관간의 이해관계부족이 주된 이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재난관리 공무원 부족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였다( $\chi^2=16.487, p=0.001$ ).

정부가 재난 발생 이후에 체계적 대응 및 복구를 하는지에 관해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의 차이는 없다( $T=0.780, p=0.436$ ). 체계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소방방재청은 유관기관간의 통합무선망 결여가 주된 이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담 공무원의 부족과 관련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미비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chi^2=19.594, p=0.001$ ).

재난관리정책 전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각 재난관리단계별로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법 제도적 측면, 조직 기구적 측면, 인적자원측면, 재정적 측면에서 얼마나 잘 갖추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재난관리단계 중 대비단계, 지원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순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조직 기구적 측면에서는 복구단계, 지원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순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인적자원측면에서는 지원단계, 복구단계, 대응단계, 대비단계 순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재정적 측면에서는 지원단계, 복구단계, 대응단계, 대비단계 순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3.4.3 재난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분석

재난관리단계 중 기관(부처) 간에 업무처리의 중복

**Table 15.** Preventive Preparation System to Each Station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재난에 대한 체계적 예방	2.81	0.99	3.11	1.01	2.555	0.011

**Table 16.** The Reason Why Cannot Prevent and Prepare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국가적 관심도 부족	10	11.5	7	16.3	16.487	0.001
담당자의 인지부족	16	18.4	8	18.6		
전담 공무원 부족	22	25.3	23	53.5		
통합무선망 이해부족	39	44.8	5	11.6		

**Table 17.** Confrontation Rehabilitation System to Each Station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재난에 대한 체계적 예방	3.08	0.98	3.00	0.87	0.780	0.436

**Table 18.** The Reason Why Cannot Confront and Rehabilitate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현장지휘체계 불확실	9	18.8	4	10.3	19.594	0.001
전담 공무원 부족	7	14.6	16	41.0		
기간관 협조체계미비	9	18.8	15	38.5		
통합무선망 결여	23	47.9	4	10.3		

**Table 19.** Whole Research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법 제도	대비단계	3.89	0.76	3.82	0.83	0.749	0.455
	대응단계	3.16	1.02	3.20	1.04	0.310	0.757
	복구단계	3.01	1.10	3.05	1.06	0.412	0.681
	지원단계	3.31	1.24	3.26	1.22	0.380	0.704
조직 기구	대비단계	3.18	0.80	3.19	0.80	0.253	0.800
	대응단계	2.77	0.99	2.74	1.03	0.205	0.838
	복구단계	3.73	1.01	3.74	0.98	0.105	0.916
	지원단계	3.74	0.82	3.75	0.82	0.142	0.887
인적자원	대비단계	2.56	0.92	2.52	0.91	0.387	0.699
	대응단계	2.80	1.02	2.82	1.05	0.177	0.860
	복구단계	3.46	1.15	3.51	1.13	0.351	0.726
	지원단계	3.60	0.85	3.64	0.84	0.419	0.676
재정적	대비단계	2.65	0.84	2.66	0.89	0.151	0.880
	대응단계	2.84	0.95	2.88	1.10	0.318	0.751
	복구단계	3.44	1.16	3.52	0.96	0.647	0.518
	지원단계	3.63	0.89	3.67	0.84	0.341	0.731

**Table 20.** Whole Analysis of Disaster Management Business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예방단계	3	1.8	35	25.7	88.265	0.001
대비단계	11	6.6	43	31.6		
대응단계	134	80.2	46	33.8		
복구단계	19	11.4	12	8.8		

**Table 21.** Group Where Duplication or Collision Occurs the Most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소방방재청-부처	47	28.1	39	28.7	0.739	0.691
소방방재청-지방자치단체	88	52.7	66	48.5		
소방방재청-유관기관	32	19.2	31	22.8		

이나 충돌 등 처리과정의 혼성이 가장 많은 단계가 어디인지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이 발생 한 후인 대응단계에서 처리과정의 혼선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담당자들은 복구단계를 제외 한 나머지 처리과정에서 혼선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chi^2 = 88.265, p = 0.001$ ).

업무를 하면서 중복 또는 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 집단들은 어디인지 확인해보았다. 확인결과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한 응답이 나왔고( $\chi^2 = 0.739, p = 0.691$ ), 두 집단에서 소방방재청-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부처, 소방방재청-유관기관 순으로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아 재난관리담당공무원들간의 업무협조가 좋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 및 각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 재난관리 업무의 중복처리과정의 혼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제경험과 비슷하지만 소방방재청과 부처간의 충돌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chi^2 =$

0.443,  $p = 0.931$ ).

재난관리단계(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지원단계)별로 업무처리의 중복 또는 충돌 등 처리과정의 혼선으로 인해 재난관리의 효과성에 가장 큰 지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예방단계의 요소는 지역위험성 파악 및 대피계획, 시설물단위 점검관리, 지구단위 점검관리, 분야별 예방활동, 심사 및

**Table 22.** Confusion of Duplication Control Process of Disaster Management Business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소방방재청-부처	9	5.4	7	5.1	0.443	0.931
소방방재청-지방자치단체	107	64.1	84	61.8		
소방방재청-유관기관	40	24.0	37	27.2		
기타	11	6.6	8	5.9		

**Table 23.** Factors tha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Risk Management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예방 단계	지역위험성 파악/대피계획	3.43	0.71	3.19	0.96	22.364	0.019
	시설물단위 점검	2.98	0.68	2.90	0.71	0.969	0.333
	지구단위 점검	2.61	0.86	2.66	0.85	0.519	0.604
	분야별 예방활동	1.51	1.33	1.74	1.47	1.438	0.151
	심사 및 평가	4.47	1.36	4.50	1.33	0.174	0.862
대비 단계	인력/조직 동원준비	2.43	1.55	2.29	1.52	0.812	0.417
	물자동원준비	2.71	0.70	2.65	0.68	0.654	0.513
	장비/시설 동원준비	2.23	1.33	2.34	1.30	0.691	0.490
	교육	3.23	0.96	3.29	0.97	0.542	0.588
	훈련	4.40	1.21	4.46	1.17	0.441	0.066
대응 단계	상황관리	1.50	0.77	1.49	0.75	0.118	0.906
	응급조치	2.35	0.85	2.22	0.83	1.364	0.174
	응급복구	2.48	0.81	2.52	0.79	0.467	0.641
	긴급구조구난	3.66	0.83	3.63	0.87	0.331	0.741
복구 단계	이재민관리	2.92	1.04	2.99	1.19	0.596	0.552
	구호활동	2.13	0.80	2.13	0.85	0.007	0.995
	복구계획	3.11	1.05	3.01	1.06	0.827	0.409
	복구사업관리	1.86	1.04	2.00	1.18	1.124	0.262
지원 단계	기획 및 재정관리	2.41	1.27	2.36	1.30	0.316	0.752
	안전문화	2.16	0.87	2.35	0.95	1.809	0.071
	국제협력/연구관리	2.70	1.39	2.90	1.36	1.236	0.217
	정보화기획관리	2.74	0.72	2.99	0.91	2.724	0.007

평가이고, 대비단계의 요소는 인력/조직 동원준비, 물자동원준비, 장비/시설 동원준비, 교육, 훈련이고, 대응단계의 요소는 상황관리, 응급조치, 응급복구, 긴급구조구난이고, 복구단계의 요소는 이재민관리, 구호활동, 복구계획, 복구사업관리이고, 마지막으로 지원단계의 요소는 기획 및 재정관리, 안전문화, 국제협력/연구관리 그리고 정보화기획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3.4.4 재난관리 행정체계의 성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 분석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에 관해 소방방재청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재난을 예방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으로 재난발생시 응급대응, 재난 후 원래 상태로 복구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면 재난을 예방하는게 중요하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68.1%)가 소방방재청(5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는데 반해, 재난발생시 응급대응의 경우 소방방재청(39.5%)가 지방자치단체(24.8%)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있식의 차이가 약간 있었다( $\chi^2 = 10.157, p = 0.017$ ).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견을 살펴본 결과 재난담당자들은 재난에 관련된 집단(건설업자, 가스관계업자, 지하철공사업자 등)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관할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응답하였지만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시행하고 있는 재난관리 현실이 어떠한지 의견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진다(49.7%)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후처리관리에 치중한다(22.8)와 일정한 기준이 없다(22.2)가 그 뒤를 잇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이루어진다(42.6%)와 사후 처리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36%)가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chi^2 = 41.833, p = 0.001$ ).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업무의 능력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소방방재청 조직에 대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40.4%의 응답자가 잘

Table 24. Kinds of Character of Disaster Management of Fire Station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재난을 예방	90	53.9	92	68.1	10.157	0.017
재난발생시 응급대응	66	39.5	33	24.8		
재난 후 원래 상태로 복구	11	6.5	9	7.1		

Table 25. Who are Responsible for the Case of a Disaster Occurring in the Community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중앙정부	18	10.8	12	8.8	1.594	0.661
관할자치단체	26	15.6	19	14.0		
재난 관련 집단	113	67.7	100	73.5		
기타	10	6.0	5	3.7		

Table 26.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Actuality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잘 이루어진다	83	49.7	20	14.7	41.833	0.001
사전 예방에 치중	9	5.4	9	6.6		
사후 처리에 치중	38	22.8	49	36.0		
일정한 기준이 없다	37	22.2	58	42.6		

**Table 27.** Disaster Management Business Ability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조직이 미약	63	37.7	35	25.7	32.947	0.001
조직이 적절	81	48.5	43	31.6		
조직이 거대	0	0.0	3	2.2		
잘 모름	23	13.8	55	40.4		

**Table 28.** Disaster Management Business Alliance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업무협조	2.60	0.92	2.46	0.90	1.288	0.199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조직이 적절하다(48.5%), 조직이 미약하다(37.7%)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chi^2 = 32.947, p = 0.001$ ).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업무는 재난관리 업무에 비하여 조직이 약간 미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방방재청과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난관리 업무협조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은 평균이 2.60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이 2.46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T = 1.288, p = 0.199$ ).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평균 3보다 낮으므로 재난관리 담당자들은 “소방방재

청과 다른 기관이나 단체 사이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았다. 소방방재청은 부처이기주의(47.1%), 통합무선망 부재(24.7%), 통합하기 힘든 기관(18.8%), 업무가 틀림(9.4%) 순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부처이기주의(72.3%)가 대부분이었다.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주된 이유는 부처이기주의 이지만 소방방재청에서는 통합무선망 부재가 업무협조에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chi^2 = 13.645, p = 0.003$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정책의 발전방안으로는 ‘업

**Table 29.** Disaster Management Business Alliance Relationship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통합하기 힘든 기관	16	18.8	8	9.6	13.645	0.003
업무가 틀림	8	9.4	8	9.6		
부처이기주의	40	47.1	60	72.3		
통합무선망 부재	21	24.7	7	8.4		

**Table 30.** Local Government Development Plans of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유기적 협조체계	113	67.7	87	64.0	3.713	0.446
전문성 확보	32	19.2	37	27.2		
예산 지원	7	4.2	4	2.9		
정책적 지원	10	6.0	6	4.4		
기타	5	3.0	2	1.5		

**Table 31.** Opinion About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Act and Advanced Foreign Department in charge of the Disaster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통합적 재난관리법 제정	3.89	0.54	3.77	0.70	1.560	0.120
재난전담부서 도입	3.59	0.71	3.66	0.70	0.922	0.357

**Table 32.** Opinion About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 New Administrative Agency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새로운 방재기관	111	66.5	28	20.6	70.394	0.000
현재 소방방재청	33	19.8	64	47.1		
필요없다	5	3.0	25	18.4		
잘 모르겠다.	18	10.8	19	14.0		

**Table 33.** Given a Disaster Situation, the Right Decisions in Ministries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재난 대처능력	3.78	0.63	3.40	0.97	3.942	0.001
재난관리를 위한 투자 필요성	3.57	1.02	3.81	0.92	2.131	0.034
부추내 정확한 의사결정	2.95	0.93	2.49	1.07	4.008	0.001

무적으로 조직간 유기적 협조체계 확립이 필요하다'와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순으로 재난관리 담당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통합적 재난관리법 제정과 선진외국의 재난전담부서의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난 담당자들은 통합적 재난관리법제정과 재난전담부서 도입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간 차이는 존재치 않았다(재난관리법:  $T = 1.560, p = 0.120$ , 재난전담부서:  $T = 0.922, p = 0.357$ ).

현재 재난관리는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임시 기구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재난관리를 위한 새로운 행정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chi^2$  검정통계량이 70.394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새로운 방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를 원하지만(66.5%),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소방방재청을 토대로 다른 조직과 통합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다(47.1%).

재난상황이 주어졌을 때 대처능력,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 그리고 재난 시 부처내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소방방재청(3.78)이 지방자

치단체(3.40)에 비해 잘 파악하고 있었다( $t = 3.942, p = 0.001$ ).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준비 및 투자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3.81)가 소방방재청(3.57)에 비해 더 느끼고 있었다( $T = 2.131, p = 0.034$ ). 재난상황에서의 부처내의 정확한 의사결정은 소방방재청(2.95)이 지방자치단체(2.49)보다 잘 내리고는 있으나( $T = 4.008, p = 0.001$ ), 평균이 3에 미치지 못하므로 앞으로 부처내 의사결정에 앞서 심사숙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조사한 결과 부처간 협력의 부재(39.3%), 재난통합무선망 미비(27.1%), 전문가의 부재(22.4%), 관련부처의 분산과 다원화(3.6%), 정보화 미비(3.3%), 교육훈련의 부재(3.0%), 재정지원의 미흡(1.3%) 순으로 나왔다.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조사하면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chi^2 = 94.880, p = 0.001$ ). 소방방재청은 부처간 협력부재(50.9%)와 재난통합무선망 미비(36.5%)를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의 부재(46.3%), 부처간 협력의 부재(25.0%), 재난통합무선망 미비(15.4%)

**Table 34.** The Biggest Problem of Disaster Management Setup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chi^2$	P
	N	%	N	%		
부처간 협력 부재	85	50.9	34	25.0	94.880	0.001
정보화 미비	6	3.6	4	2.9		
전문가 부재	5	3.0	63	46.3		
교육훈련 부재	3	1.8	6	4.4		
재정지원 미흡	0	0.0	4	2.9		
부처의 다원화	7	4.2	4	2.9		
재난통합무선망 미비	61	36.5	21	15.4		

**Table 35.** Professionalism of Government Employee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구분	소방방재청(N = 167)		지방자치단체(N = 1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무원의 재난관리 전문성	2.62	1.13	3.08	1.04	3.709	0.001

순으로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관련부처의 분산과 다원화로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전담부처 일원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물어본 결과 전담 부처의 신설이 7명(63.6%)이고 국가재난관리센터 위주의 개편이 4명(36.4%)으로 보아 재난관리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재난관리 부처 공무원들의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했다. 확인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담당자(3.08)가 소방방재청에서 근무하는 담당자(2.62)보다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소방방재청의 경우 자리아동이 빈번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T=3.709, p=0.001$ ).

#### 4. 결 론

현대 사회는 재난발생 잠재력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위험 사회(Risk Society)”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발전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풍백화점 등 수차례의 대형재난을 경험한 이후에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법제화 하였다. 그러나 통합재난관리체계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어 통합재난관리체계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재난관리담당공무원들의 설문조사에서 발견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세 기관인 소방방

재청,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없었다. 즉 세 기관은 재난관리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재난관리활동의 환경적 요인을 11가지 중 재난관리유발요인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인간의 행위요인 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난관리 상황요인으로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및 자연적 요인 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난관리 활동의 환경적요인 중 정치적인요인과 경제적요인은 주요한 재난관리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리하였을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결과 전통적 안보분야와 국가기반핵심기반분야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더욱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재난분야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현실에 대해 세 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난관리의 현실이 ‘일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에 전체의 41%가 응답했다는 사실과, 소방방재청과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난관리 업무협조에 대해 40.3%가 ‘대체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이는 세 기관에서는 재난관리법 및 재난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재난전담부서의 새로운 창설이나 혹은 기존의 기관 중심

의 통합이나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데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소방방재청으로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소방방재청으로 통합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해 본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능력의 문제점으로 '조직이 미약'에 응답자의 61%가 응답함으로써 소방방재청으로 통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고려된다. 재난관리의 전반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크게 인적자본, 구조자본, 고객자본,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역량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각 영역에서 모두 보통(3)이하의 평균을 기록함으로써 재난관리의 전반적인 상태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위 논의에서 밝혔던 소방방재청으로 통합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현재 재난관리의 문제점으로 '관련부처의 분산과 다원화'를 3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낸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통합은 전반적인 측면의 보완과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의 전반적인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고려되어진다.

이 연구 설문결과에서 재난관리 단계 중 혼선이 가장 많은 단계가 대응단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 재난관리 기관들의 재난 발생시 대응이 미비함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기관 별로 다른지에 대한 분석결과 예방, 대비, 대응단계에서 유관기관이 평균이 높아 미래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도 모든 기관에서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통합과 재난관련법의 제시

는 꼭 필요하다.

재난이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이기 때문에,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현재 통합재난관리체계가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 참고문헌

1. 김경안, 유충, “이론과 실제: 재난대응론”, 도서출판 반, p.11(1998).
2. 김영규, “지방정부와 재난관리 정책”, 지방연구, pp.155-201(1997).
3. 윤병준, “재난과 재난관리 해설”, 한국학술정보, pp.103-104(2007).
4. 이재은, 재난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p.165(2006).
5. 이창원, “국가 재난관리정책에 있어 현장중심 소방의 역할증대”, 재난의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p.59(2009).
6. 제주발전연구원, “소방관서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pp.50-80(2006).
7. Petak, William J.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Special Issue, Jan.), p.3 (1985).